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 속의 남북경협에 관한 정책연구

이병철
행정학과

<요 약>

본 연구는 우선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에 입각하여 남, 북경협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분석·평가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남, 북경협의 바람직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변모하는 세계경제환경아래에서 나타난 남북경협의 문제점은 첫째, 남북경협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남북간 교역을 국가간 교역이 아닌 민족내부거래로 인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WTO체제 또는 국제사회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 둘째,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자율과 개방화시대에 맞지않게 정부규제조항이 많고 시의성에 부합되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 있다는 점 셋째, 북한이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민간레벨의 남북경협을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주변4강 특히 미국과 일본의 북한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견제와 간섭도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점 넷째, 세계경제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이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남북경제협력력을 보다 시의성있고 적실성있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 관련정부조직이 일관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문제의 사안에 따른 해결책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현실은 경협 관련부서간의 정책일관성의 실종, 부처이기주의나 업무협조 실패, 그리고 조직의 방만성 등으로 경협의 효율적 달성을 이루어 낼 수 없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 위한 바람직한 남북경협의 정책방향이 다각적인 시각에서 강구되어 제시되었다.

A Study of the Policy Direction for the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in the Period of Reshuffling World Economic Circumstances

Lee, Byung-Chul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prospects for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is paper also investigates the existing problems regarding its economic cooperation in the near future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finds a possible solution for them. There are several existing problems such as the differences in government regulations, laws, trade pressures from foreign countries, and political intentions which acts a barrier of the trade expansion between the countries. In addition, the inharmonious cooperation among inter governmentals becomes a serious problem at this point.

As a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both countries' policies toward economic cooperation should emphasize on the economic position rather than the political position. On the other hand, to reduce a possible trade conflict against foreign countries by increas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both countries should prepare a political strong reason with a mutual confidence and its economic interests. Also both countries should implement policy for the adaptation to the external hostile economic environments which has been changed drastically. Finally, it is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establish a organic cooperation among inter governmentals to improve its economic cooperation

1. 들어가면서

최근에 한·미간의 자동차협상은 냉전체제의 와해와 새로운 세계질서의 도래를 실감케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적절한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무차별적인 무역보복을 전제로하는 슈퍼 301조의 적용과 세계무역기구(WTO)에의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냉전시대의 원조국으로 그리고 한국전쟁의 혈맹으로서 우리에게 인식된 미국의 모습과는 사뭇 대조되는 면모이다.

이와 같은 일면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세계질서는 사회주의의 종언이후 종전까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우선적인 국제정치구도에서 경제로 대변되는 국익을 우선시하는¹⁾ 철저한 실리위주의 정치체제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는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가트·브레튼우드(GATT·Bretton Woods)체제를 대체한 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중심이 되었으며 UR, BR, TR, GR, CR 등²⁾으로 표현되는

1) 이에 관한 이론적 도움은 다음의 책이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Richard Rosecrance, *The Rise of the Trading State* (New York: Basic Books, Inc., 1986) ; Richard Rosecrance and Arthur Stein, "Interdependence : Myth or Reality", in *World Politics* (July 1973) ; Michael Stewart, *The Age of Interdependence* (Cambridge, Mass.: MIT Press, 1984) ; Kenneth Waltz, "The Myth of National Interdependence", in Charles Kindleberger, ed.,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Cambridge, Mass.: MIT Press, 1970) ; Lester Thurow, *Head to Head : The Coming Economic Battle Among Japan, Europe, and America* (New York : William Morrow and Company, Inc., 1992) ; George Friedman and Meredith Lebard, *The Coming War With Japan*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91) ; Peter F. Drucker, *Post-Capitalist Society* (New York : Harper Business, 1993)

2) UR은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를 의미한다. GATT창설이후 지금까지 모두 7차례의 라운드가 있었는데 7차는 도쿄(Tokyo Round)에서 개최되었고 8차회담은 1986년 우루과이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GATT체제를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세계무역기구라는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틀이 짜여지게 되었다. 이외에 BR은 Blue Round의 두문자로서 노동조건협상을 의미하며 TR은 Technology Round의 두문

범세계적 교역체제의 구축과 출범이 시작되고 이와 궤를 같이 하면서 보다 확대된 EU, NAFTA체제의 출범, 그리고 APEC 등 지역적 경제블록화와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써로우(Lester Thurow)는 앞으로의 세계경제는 무역을 축소하거나 억제했던 1930년대 무역장벽과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으나 정부에 의해 관리(managed trade)되는 준무역장벽(quasi trading blocks)이 역내 국가와 역외 국가간의 교역을 차별화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³⁾ 시각차이에 따라 평가는 다를 수 있겠으나 분명한 점은 이제 세계의 새로운 질서는 자국의 국가이익우선주의라는 명제하에 경제적인 지역패권주의로 정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⁴⁾

이렇듯 포성없는 경제전쟁의 소용돌이속에서 새로운 세계에 적응키 위한 체제개혁과 발상 및 사고의 대전환이 각 국가별로 모색되고 있으나 아직도 한반도지역은 냉전의 잔재를 말끔히 씻어내지 못한채 남과 북의 무한 소모적인 갈등구조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북의 공동번영과 통일달성 그리고 통일후의 국가위상정립에도 부담과 걸림돌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소모적 진극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남북 당사자간에 한 시바빠 이루어져야 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에서 우리 민족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북한경제의 회생(回生)이 이러한 시각에서 심감히 고려하여야 할 사안으로 떠 오르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선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에 입각하여 남, 북경협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분석·평가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남, 북경협의 바람직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코자 한다.

2.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의 분석과 남북경협의 필요성

1)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의 분석

기준의 국제교역을 관상하던 GATT의 기본정신은 공동의 기준을 마련하여 동등한 경쟁의 장(場)을 제공하는데 있었으며 무역제한과 관세장벽도 케네디 라운드나 도쿄 라운드를 통해 점차 완화시켰다. 그리고 최저세의 관세와 시장에의 접근용이성 그리고 최저의 금지사항 등을 포함하는 유리한 대우를 받는 국가는 타국 모두에 대해 똑같은 대우를 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등이 실질적인 장벽없는 자유무역을 가능케 하였다.⁵⁾

그러나 현금에 와서는 어느나라도 이러한 동등한 경쟁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기입장에서 유리한 면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국제교역은 점차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와의 특별협약에 관한 협상, 그리고 유럽의 경제통합을 위한 쌍무협의 등 GATT체제하에서는 용납되지 않고 또한

자로서 기술문세협상을 의미하고 GR은 Green Round의 두문자로서 환경문세협상을 의미하며 CR은 Competition Round의 두문자로서 경쟁조건협상을 의미한다.

3) 미주시장내의 캐나다와 같이 특정블록내에 있는 국가들은 갈록 외부국가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무역관련 특권을 부여 받고 있다. Lester Thurow, *op cit.*, p.66.

4) 어떤 두나라가 이념적으로 결속되어있다고해서 양국간의 화해관계가 영속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이념이 같다고 해도 그들의 국가이익은 서로 상치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의 이해관계에 따른 국익추구라는 신국제질서의 틀은 어떻게보면 냉전체제에서보다 더욱 더 국가간의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파게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Hans J. Ma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 Alfred Knopf, 1973), Ch.1 & Ch.14.

Richard Rosecrance, *The Rise of the Trading State* (New York : Basic Books, Inc., 1986), Ch.3.

5) Walter Russell Mead,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Economy*, Walter Russell Mead, "From Bretton Woods to the Bush Team", *World Policy Journal*, Summer 1989, p. 3, 10, 26.

최혜국 개념과도 상이한 원칙을 가지는 쌍무협상이 세계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제 세계는 쌍무협상을 통해서만 안정적인 교역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1920년대의 교훈을 잊어먹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번모된 세계경제환경에 적응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계는 지금 새로운 경제환경에 맞춰 새로운 구도를 짜기 위해 농분서주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구도를 짜는데 있어 특기할 점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해를 같이하는 여러나라가 무리를 지어 경제의 벽을 높게 쌓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경제블록⁶⁾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지는 의도와 특성, 그리고 내용에 따라 여러종류로 나눌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 FTA),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동맹(Economic Union) 그리고 지역협력(Regional Cooperation) 등이다.

이를 이해의 편의를 위해 간략히 설명하면 우선 자유무역지역이란 회원국간의 관세 및 수량제한의 철폐 등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경제블록으로는 1960년에 7개국으로 결성된 『유럽자유무역지역(European Free Trade Area : EFTA)』과 같은 해 남미 11개국으로 결성된 『남미자유무역지역(Latin American Free Trade Area : LAFTA)』 그리고 1989년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으로 결성된 『북미자유무역지역(North American Free Trade Area : NAFTA)』 등이 있다.

다음 관세동맹은 동맹국간에 무역제한이 없고 비동맹국과의 무역에는 동맹국간에 관세에 관한 공동정책을 펴서 대처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경제블록으로는 팔롬비아,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등으로 구성된 『안데스공동체』와 도미니카, 바하마 등 13국으로 결성된 『카리브공동체(Caricom : Caribbean Community)』 등이 있다.

그리고 공동시장은 블록내 국가간에는 무역제한의 철폐에 그치지 않고 생산요소의 이동에 대한 제한도 철폐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경제블록으로는 유럽지역 12국으로 결성된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 EC)』 등이 있다.

또한 경제동맹은 동맹국간의 공동시장을 기초로 공동의 금융, 재정정책을 가지는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경제블록의 예로는 1921년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간에 결성된 동맹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협력은 경제통합의 정도는 밀접한 관계는 아니나 상당정도 국가간의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그 예로는 『동남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ASEAN)』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회(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PEC)』 등을 들 수 있다.

냉전체제의 종식이후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세계경제의 3극화로 지리적으로 거대한 세계의 경제이해관련국들이 자신들이 처한 여건과 형편에 따라 앞에서 언급한 다종 다양한 형태의 경제블록을 형성하는 것이다. 바로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공동시장의 형태를 띄고 있는 『유럽연합』,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의 형태를 띄고 있는 『북미자유무역지역』, 그리고 미국, 일본, 신흥공업국(NICs)과 동남아국가연합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의 형태를 띄고 있는 『아·태 경제협력회의회』이다.

이 세계의 거대 경제블록은 앞으로 다가올 세계경제전쟁에서의 비교우위를 쟁하기위해 현재에도 치열한 점전(head to head competition)⁷⁾을 벌이고 있으며 각 블록은 나름대로

6) 씨로우는 1930년대의 경제블록과 구별하기위하여 현재 나타나고 구축되고 있는 경제블록을 '준경제블록(quasi trading blocks)'이라고 명명하고 이러한 블록은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교역(managed trade)'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Lester Thurow, *op. cit.*, p.66.

7) 씨로우는 앞으로의 세계경제전쟁을 독일을 중심으로한 유럽연합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의 싸움으로 상징

세계적인 자유무역과 범세계적 경제통합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가속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발빠른 결속이 오늘날의 일은 아니었다. 1930년대에도 이러한 결속은 있어 왔으나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은 과거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권역내의 강력한 경제동맹체를 결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통합과 정치통합을 목적으로 강력한 결속에 기반을 둔 경제블록화를 도모하고 있는 유럽연합이 블록화의 성공으로 여타국가들의 느슨하고 비효율적인 블록화를 압도하고 향후 경제전쟁의 최후의 승리자가 될지도 모른다.

썬더우는 다가오는 치열한 경제전쟁에 최종적 승리자는 유럽연합이 될 것이며 미국과 일본은 이 게임의 패자로 선락할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⁸⁾ 이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만큼 경제블록화의 성공여부가 향후 국가운명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가장 경제블록화를 앞서서 추진해 나가고 정치적 통합까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유럽의 결속은 이미 1952년 프랑스의 장 모네의 구상에 따라 서독,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하는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설립할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후 1957년에서 58년에 걸쳐 위의 6개국이 로마조약을 통해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 EEC)』를 결성하고 1960년에 스톡홀름회담으로 『유럽자유무역지대(European Free Trade : EFTA)』를 설립함으로써 유럽의 경제적 결속의 초석이 다듬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후 1978년 『유럽공동체(EC)』가 출범하였고 출범한지 10여년도 채 안된 1986년에 회원수는 12개국에 달했으며 1991년 EC와 EFTA를 통합하여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 EEA)』을 발족시켜 유럽을 단일시장화하려 하였으나 냉전종식에 따르는 후유증으로 지체되다가 1993년에야 단일시장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1994년 『유럽연합』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 유럽연합의 결성목적은 첫째, 시장통합 둘째, 경제와 통화통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통합에 두고 있다.

시장통합은 거대시장을 형성하여 규모의 경제이점을 살려 세계속에 강력한 유럽경제를 재건하고자 하는 것이고⁹⁾ 경제와 통화통합은 EC국가들간의 제반 경제적 경계를 허물고 유럽단일화폐를 통용하고 환율변동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¹⁰⁾ 정치통합은 정치적 공동체가 되어 외교, 안전보장 정책 등을 공동으로 세우고 유럽의회를 활성화하여 모든 문제나 분쟁을 공동으로 대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유럽연합은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 EU에 가입했으며 머지않아 동구권도 가입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모든 것이 계획대로 달성된다면 세계최대의 경

하고 이들간의 전쟁이 치열한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서의 표제와 같은 글이 바로 치열한 접전(head to head)이기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해 보았다. Lester Thurow, *op. cit.*, 참고

8) Lester Thurow, *op. cit.*, pp. 24-25.

9) 미국이나 일본에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유럽경제를 이룩하기위해 유럽은 기술개발투자에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특히 유레카(Eureka)나 제시(Jessi), 비전(Vision) 1250, 그리고 에스프리(Esprit)같은 범유럽의 기술개발 컨소시엄 결성등도 정부차원의 직접 지원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Beavis Simon and Jule Wolf, "Europe Sets Its Sights on Lead in New TV Market", *Europe*, June 26, 1990, p.10.

10)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유럽통화단위 (ECU : European Currency Unit)가 등장하였고 이것은 유럽통화기금 (European Monetary Cooperation Fund : EMCF)에 의해 관장되었고 EMCF는 매 5년마다 각 나라의 화폐와 환율을 조절하였다.

제불록을 결성하게 되는 것으로 세계경제구도와 질서를 짜는데 있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사실상 유럽은 가장 높은 교육을 받은 수많은 노동력을 지니고 있으며 오랜 전통과 진수를 통해 집적되어 온 기술로 무장된 기능인들이 많고 통합된 독일은 중심으로 막강한 금융, 재정력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1990년 무역흑자는 세계최대였고 국민 1인당기준으로 일본의 거의 3배이다. 여기에 구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의 첨단과학력과 문화, 그리고 동구권의 강점 등이 합해지며는 거대한 단일시장을 구성할 수 있을뿐 아니라 성장잠재력면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만큼 경쟁력을 갖춘 경제블럭이 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썸머우는 앞으로의 경제질서와 구도, 그리고 경제운영의 규칙 등은 마치 19세기에는 영국에 의해 쓰여지고 20세기에는 미국에 의해 쓰여졌듯이 유럽에 의해 쓰여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¹¹⁾도 이러한 생각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불론 유럽연합이라고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서유럽경제가 진정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그 통합이 신속히 중부와 동부유럽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구공산권경제가 성공적인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유럽이 가까이 상당규모의 경제지원을 이 지역에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옛국경과 민족감정문제도 유럽연합의 또 하나의 약점이 되는 것이다. 걸프전과 최근의 보스니아사태에서도 이러한 약점이 노정되고 있다.

다음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20세기 특히 제2차세계대전이 끝났을 때는 세계총생산의 40%를 점유하였고 1950년대에는 50%를 훨씬 상회하였던 거대국가(giant country)였다. 미국은 전후 피폐화되어있는 세계경제를 성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세계경제의 기관차였다. 마샬플랜등이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1981년과 82년의 세계공황기에 접어들어 미국이 이끌던 세계경제기관차는 마치 막 몸부림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1983년과 84년의 유럽과 일본의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바로 미국에의 수출을 통해서 얻어졌으며 이로 인해 미국은 유사이래 최초로 대쪽의 무역적자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한 무역역조가 과거와 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이며 구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1980년대 후반에는 세계총생산의 22%내지 23%까지 하락하였다.¹²⁾ 이러한 흐름은 현재 미국을 제1의 채권국에서 1조달러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채무국으로 전락시켰으며 계속되는 경기침체는 미국경제의 근본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원래 GATT의 기본정신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공동의 기준을 마련하여 동등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고 최혜국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나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결코 이러한 경쟁의 규칙을 고수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장래를 비관적으로 보아서는 안되는데 그 이유는 미국도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21세기에 분산배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적 자산을 가

11) 썸머우는 새로운 세계교역규범은 유럽에 의해 쓰여질 것이며 여타의 국가들은 유럽에 의해 쓰여진 규범을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 보고있다. 그는 "항상 그랬듯이 세계최대의 시장을 지배하는자가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이 세계최대시장을 지배했을때는 미국이 규칙을 제정해야만 했다. 유럽인들이 그들 내부의 공동시장에 적용할 규칙을 협의할때 유럽 외부국가들에 의한 시장 접근 관련사항을 결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다음 세기의 세계무역규범을 제정하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 모두가 유럽에서 제정된 규칙을 세계의 사실상의 운영시스템으로 점차 채택해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Lester Thurow, *op. cit.*, pp. 65-66. ; Lester Thurow, *op. cit.*, pp. 24-25.

12)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April 1991. p.1.

장 많이 갖고 출발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면에서나 미국의 1인당 소득과 평균생산성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 또한 대학교육을 받은 노동인구가 세계에서 최대이며 미국의 내수시장은 일본보다 크고 유럽보다는 동질성 면에서 훨씬 앞서가고 있는 것이다.

다음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전후 공동체적 자본주의에 입각하여 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라 소비보다 투자를 우선시하고 낮은 투자수익률을 기꺼이 수용하면서 기업간의 결속을 강화시키고 노동자의 대우를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지속함으로써 짧은 시간내에 세계경제규모로 미국 다음가는 경제대국을 건설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볼때 일본경제의 앞날은 장미빛이지만 일본 역시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나친 생산자경제학이 가져오는 폐단을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지금과 같이 경제가 비대해진 일본이 계속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빠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증가시키고 해외시장을 삼식해가야 하는데 이것을 다른나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세계각국은 필요하다면 명백한 제약을 가해서라도 일본의 수출주도형 경제를 저지하려 할 것이다. 현재 이러한 움직임이 블록경제의 움직임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약점은 강점으로 작용했던 내부결속 문화의 역기능이다. 21세기의 경제게임에는 다른 문화와 국적을 가진 관리자와 전문가들을 동질성의 한 집단으로 통합시켜야 하며 이런 면에서 폐쇄적인 일본의 내부결속 문화는 한계를 갖게 될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역사와 문화로 인해 유럽이나 미대륙의 경제블록에 필적할만한 태평양 연안지역 경제블록을 일본이 주가 되어 창조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각국가들의 경제적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경제블록은 보다 강화될 것이고 배타적이 될 것이다. 세계의 경제전쟁은 이런 맥락에서 필연적이며 그 강도 역시 치열할 것이다. 이제 세계는 자국의 국익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 종전까지의 가트·브레튼우드체제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냉혹한 경제전쟁으로 돌입할 것이다.

2) 남북경협의 필요성

이러한 세계환경은 한반도라고 예외인 수는 없다. 경제적으로 약진하려고 하는 신흥공업국인 한국이나 경제적으로 피폐에 빠져 개방화를 피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처해 있는 북한이나 모두 세계경제전쟁의 와중으로 빠져들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기존의 남북한체제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남북의 상호 자의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용물이 치고 있는 세계환경에서 생존하려면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환경은 더 이상 소모적인 남북한의 갈등을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은 한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세계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한 맥락에서 한국은 한편으로는 블록경제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키위해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노력이 절실하고 또한 환태평양권역을 중심으로하는 경제블록 결성과 이의 참여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상호교류와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 스스로 개방화의 길을 자연스럽게 걷고 더 나아가선 자생력을 갖도록하여 향후 다가올 경제적 통합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적 의미를 떠나서라도 이러한 경제적 통합의 의미는 현재와 같은 국제환경에서는 남북한 모두 필요로 되는 접근이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기존의 폐쇄적인 경제체제로는 새로운 세계환경에 적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체제유지에도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으므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여러가지 측면에서 잇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한국과의 교류와 경제협력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남북이 경제적으로 통합되고 이를 통해 남북의 경제력이 증대될 때 세계 경제에서의 남북의 경제위상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민족이익이나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하여 새롭게 짜여지는 블록경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며 장차 다가올 정치통합에서도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남북이 정치적으로 침체하게 대립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남북협력의 가능성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한국과 북한의 경제협력을 둘러싼 경제환경을 살펴보면 그 당위성이나 필요성이란 관점에서 남북경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렵지는 않다.

현실적으로 북한은 80년대 이후 계획경제 자체가 지니는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 성장한계에 부딪쳐 국가의 살림이 보나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고 과도한 군사비지출과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비용의 증대 등으로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으나 한국은 비판적인 시각에서 볼 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고도의 경제성장과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활성화로 인해 상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신진국의 문턱에 다다르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¹³⁾

또한 경제발전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는 후발 개도국들의 본보기 모델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것은 경제적 슬럼프에 빠져있는 북한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있어 가장 유용한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시각도 많다.

또한 남, 북의 내부거래로 인한 관세의 비적용, 지역적 근린성에 따른 교통, 수송비용의 절감, 산업구조의 차이에 기인한 상호보완성, 동일한 언어체계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화, 인적·물적 교류에 따른 분단상황에 따른 이질화의 집진적인 해소, 통일비용의 결과적인 절감효과 등의 잇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커다란 필요성과 유인동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이미 앞에서 살펴 본 광의적인 의미의 경제환경과 어우러져 남, 북경협에의 당위적 필요성을 짐증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 신경제환경에 따른 남북경협의 문제점

한반도 주변4강의 실리의교와 세계경제의 새로운 틀인 블록경제로 인해 각국이 국익을 우선시 할 것이므로 남, 북경협에 이러한 각국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것이며 이에 따른 상당한 견제와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한국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한국과 북한의 교역을 국가간의 교역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주변국가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이며 북한과의 통상과 북한내의 경제적 진출에 따르는 경제적 잇점을 선점하기 위하여 한국의 독자적이고 주도적인 진출노력에

13)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통해 북한의 경제환경을 고찰해 보자면 북한의 총경상GNP는 1992년을 기준으로 해서 분때 211억달러이며 1인당 GNP는 943달러이고 경제성장율은 7.6%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무역총액은 26억 6천만달러이고 외채규모는 97.2억 달러로써 외채 대 GNP의 비율은 46.0%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한국의 경우와 수평적 비교를 해 보면 총경상GNP는 2,945억달러로써 거의 15배 가까이 뛰지고 있으며 1인당 GNP는 한국이 6,749달러로써 거의 7배 가까이 뛰지고 있고 경제성장율은 한국이 4.7%를 달성해 이번에서도 크게 뛰지고 있다. 그리고 대외무역총량도 한국이 1,548억달러로써 거의 60여배 가까이 뛰지고 있으며 외채도 한국이 428억달러가 되나 GNP와의 대비비율을 보세되면 14.5%로써 북한보다 3배정도 낮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행, 1993.

쟁기를 박고자하는 것이 또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일관된 정서이기도 하다.

특히 경수로의 건설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의 견제와 간섭은 극에 달할 것으로 판단된다.¹⁴⁾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잇집에 부가해 정치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가세되어지면 더욱 더 그 파장은 증폭될 것이다.

한국은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으로 구성된 『한국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 핵심적 역할을 원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이러한 한국의 의지를 실현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미국은 무역억조를 빠른 시간내에 시정키 위해 강력한 규제위주의 보호무역을 추진시켜 나갈 것이다. 슈퍼301조나 WTO에의 제소 등으로 대변되는 강력한 통상압력수단이 이러한 목적에 부합될 것이다.

최근 한·미간의 무역현안으로 떠올라 심각한 통상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자동차협상도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은 슈퍼301조의 적용이나 WTO에의 제소등을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이다.

사실상 현재 미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자동차협상에서 미국은 TV광고의 불공정성의 개선(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는 자동차광고에 대한 불만과 광고시간배정에서 프라임타임을 한국차에 우선배정하는 문제에 대한 이의 등의 시정)과 리스나 할부금융을 자사금융을 통해 한국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와 미국차에 대한 형식승인제도의 폐지와 배기량이 큰 미국차에 불리하게 되어있는 자동차세의 일원적 세율적용(현재 한국의 자동차세는 차의 배기량에 비례시켜 누진적으로 적용시키고 있음) 등을 골자로 하는 요구안을 내 길고 한국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전에 보기 드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만약 이 협상이 미국의 의도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슈퍼 301조의 적용과 WTO에 제소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⁵⁾

이런 현안을 두고 볼때, 일본이나 중국과의 통상마찰도 있었지만 주(主)규제의 타겟은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선을 꿈꾸는 클린턴진영에서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지는 현 시점에서 상대하기 어렵고 그 효과도 미저수인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한국을 주(主)규제대상으로 삼아 공략함으로써 보다 단기간에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간의 첨예한 통상마찰이 예고되며 더욱이 높은 부가가치와 상징적 의미를 크게 갖는 경수로제공과 관련된 북한진출을 놓고 미국과 힘겨루기가 확실 히 예상된다.

이와 관련된 징후는 벌써 미국기업들의 움직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경수로 실제에서부터 미국관련기업들의 로비와 한국의 주도적 노력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이다.¹⁶⁾

일본 역시 한국이나 미국보다 뒤지는 상황에서 북한에 진출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분단의 고착화라는 정치적 의미를 뒤로 제쳐 놓는다 하더라도 일본의 북한진출은 새로운 시장의 확보라는 의미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 평가 할 수 있다. 최근 쌀지원문제와 북한 수해복구지원과 연관되어 더욱 가속되고 있는 북·일국교정상화의 움직임은 바로 이러한 일본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한 징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 경수로건설을 위시한 북한진출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그리고 기술력에서 한

14) 미국은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지원액과는 별도로 경수로의 부대시설지원액을 일괄타결조항을 들어 한국이 전액부담할것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중앙일보』, 1995. 9. 20., 1면.

15) 『한국일보』, 1995. 9. 21., 1면.; 『중앙일보』, 1995. 9. 20., 1면.

16)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의 갑작스런 해임과 경질도 이와 무관치않다는 시각이 많다.

국이나 미국 못지않게 비교우위를 집하는 입장에 있고 이를 백분활용하여 북한진출의 선두 주자로서 위상을 정립코자 노력할 것이다. 일본은 이미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제1의 투자국으로 자립매김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을 경제적 전초기지화하여 중국대륙의 거대한 시장을 넘보고 있다. 이에 걸림돌이 될 한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중립화시켜 동아시아지역의 경제적 해계모니를 확실히 장악하려는 것이 일본의 계산된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930년대의 '대동아공영권'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불길한 예감을 씻을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생각과 연관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한 정치적, 경제적 견제는 남북경협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일단 김일성사후의 김정일체제의 안정된 출범과 강진한 체제구축을 위해 한국정부와의 경협은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어려운 처지에 봉착하고 있는 북한이 한국정부와의 경협을 거부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북한에 추파를 던지는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새롭게 짜여지는 세계경제환경에 신속히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적 활로와 새로운 시장을 원하는 미국과 일본 등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고려에 의해 북한에 경제협력을 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인지하고 있는 북한으로는 구태여 체제붕괴의 위험을 안으면서까지 한국정부와의 경제교류를 통한 개방화전략을 서두를리는 만무한 것이다.

이에 부가하여 북한으로는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북한체제생존의 관선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두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과의 교류는 지상명제이며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경제적 진출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런 결과일런지도 모른다.

따라서 북한은 한국정부를 배제하고 미국, 일본 그리고 필요하다면 한국의 민간기업 등을 파트너로 하는 개방화전략을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이번 수재(水災)를 복구하기위해 UN과 기타 선진국가들에게는 지원요청을 하면서도 정작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정부에 지원요청을 하지 않는 것등을 통해 다시 한번 더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행태를 고려할 때 그들은 한국정부나 한국의 기업과는 교류할 의사가 거의 없음이 확실히 되나(지금까지 민간레벨과의 교호도 통일전선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많음) 워낙 북한내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고 이것이 또 다른 체제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아직 미국과 일본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수교문제가 전에 해결해야할 문제 등이 산적해 있는 관계로 북한은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현안을 타개하고, 해소하기위해 부담은 있으나 비공식적으로 한국정부가 아닌 한국기업과의 접촉을 통한 북한경제난의 해법을 나름대로 찾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우선 한국정보보다 비공식적인 민간수준의 남북경협을 원하는 이유는 우선 한국정부와의 공식적인 경협은 북한체제유지에 직접적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민간수준의 물밑거래일 경우 그러한 부담을 최소화¹⁷⁾시킬 수 있을뿐 아니라 비생산적인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경제적 실익만을 챙길 수 있다는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7) 북한은 한국의 민간기업과 경협을 하는 지역을 함경도의 오지이며 주민들의 의도된 소개가 이미 이루어진 나진, 선봉지대로 국한시키겠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한바 있다. 한국기업인들이 교통이나 통신, 그리고 수송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인프라구조가 비교적 좋은 개성등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민간기업과의 교류에서조차 북한체제에 끼칠 정치적 부담을 극소화하면서 어려운 경제난은 해소하고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하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이해 할 수 있다. 「중앙일보」, 1994. 11. 17. 2면.

그리고 한국 민간기업과의 교류는 미국과 일본기업들을 자극하여 미국과 일본정부의 북한 진출을 더욱 가속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여러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남북경협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이 그리 밝지 않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블록경제로 상징되는 보호무역주의의 자리매김으로 대변되는 세계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힘입은 북한의 한국정부를 배제한 개방화전략은 남북경협의 활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을뿐 아니라 남북의 경제와 정치통합을 통한 통일대업에도 커다란 장애로 작용할 것이 분명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경협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적시하면 우선, 남북경협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남북간 교역을 국가간 교역이 아닌 민족내부거래로 인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WTO체제 또는 국제사회간의 갈등¹⁸⁾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정부로서는 이러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위해 남북교류를 민족내부문제로 규정하고 북한으로의 수출을 반출, 수입을 반입이라고 규정짓고 구서독과 동독의 교역을 양해하는 EC와 GATT의 실행사례를 들어 남북교역이 국가간교역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세계경제질서의 개편과 이에 따른 교역조건이나 내용이 변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으며 본질적인 갈등해소나 타개의 방안이 될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자율과 개방화시대에 맞지않게 정부규제조항이 많고 시의성에 부합되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 있다는 점이다.

급격한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시의성과 적실성을 가지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보다 규제완화적이고 전향적인 개정이 촉구되는 이유도 바로 이점에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한 상품반출입은 수출입공고상 수출입자동승인품목인 경우에는 감류 외국환 은행장의 반출입승인을 받으면 되지만, 수출입제한 승인품목인 경우에는 통일원장관의 반출승인을 얻어야 한다.¹⁹⁾ 따라서 기업의 교역종사자들은 번거로운 절차와 시간소모가 요구되는 제한승인품목의 교역을 회피하고 홍콩 및 중국 등의 중개자나 자기기업의 해외 지사를 통해 경제적 이윤이 기대되는 경우 정부의 통제를 피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허점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또한 승인을 기업에 따라 차별화할 경우 특혜시비도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방지할 경우 높은 거래비용과 비생산적 이득추구행위²⁰⁾로 인한 비효율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남북간 경제교류에 부정적 영향²¹⁾을 끼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시대에 뒤진 법조항과 내용으로 인해 세계경제전쟁속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기업의 교역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우(愚)를 범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이다.

셋째, 이미 앞에서 깊은 논의를 했듯이 북한이 한국정부를 배제하고 민간레벨의 남북경

18) 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함으로써 남, 북은 국제법상 독립국가로 인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남북교역은 국제교역으로 이해되어 상호관세를 물게되어 있으나 남북당국은 민족내부거래로 간주하여 무관세를 원칙으로하고 있다. 바로 이점이 WTO체제나 세계 교역국들과 갈등과 마찰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19) 오승렬, 「남북경협추진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 「통일연구논총」, 2권, 2호, 1993, 175면.

20) A. O. Krugen,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nt-Seeking Socie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69, No.3, 1974, pp. 509-514

21) 이와같은 행위로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는 첫째, 밀수와 같이 법적 규제를 우회함으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불법행위를 유도할 수 있고 둘째, 이 조치를 통해 이득을 보는 집단이 존재할 경우 이들은 규제조치의 존속을 위해 비생산적 로비활동을 강화할 우려가 있으며 셋째, 이에 따른 이득획득위해 비생산적인 이득추구행위(rent seeking activities)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 등이다.

J. Bhagwati, "Directly-unproductive Profit-seeking Activit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82, p. 17 A. O. Krugen, *op cit*, 1974, pp. 509-514.

협을 원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주변4강 특히 미국과 일본의 북한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견제와 간섭도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점이다.

넷째, 세계경제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이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남북경제협력력을 보다 시의성있고 적실성있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관련 정부조직이 일관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문제의 사안에 따른 해결책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현실은 경협관련 부서간의 정책일관성의 실종, 부처이기주의나 업무협조 실패, 그리고 조직의 방만성 등으로 경협의 효율적 달성을 이루어 낼 수 없다는 점이다.

4. 남북경협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에 적응하고 이와 연관된 남북경협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남북경협의 정책적 방향이 구상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시각에서 정책구상을 할 수 있겠으나 앞에서 이미 분석,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강구해 나간다면 보다 문제해결에 손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될 것이란 생각에 근거하여 남북경협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첫째, 남북경협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남북간 교역을 국가간 교역이 아닌 민족내부거래로 인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WTO체제 또는 국제사회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 정책당국이 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있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 외교역량을 극대화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EC에 가입할 때 동·서독간의 경제교류를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은 바 있는데 이것은 독일이 가지는 외교적 역량의 커다란 개가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민족내부거래에 대한 사항은 남, 북한간에 이미 합의를 본 사항이므로 남북문제라기 보다는 이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계 교역국들과 해결을 보아야 할 사항이다. 이를 위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남북경협은 그 자체로 볼 때는 경제행위이지만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다른 의미의 통일문제와 연관이 된다는 점과 민족자결권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점²²⁾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다음, 독일의 선행사례를 깊이 있게 연구하여 그것을 설득의 논리와 내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세계 각국이 우리의 통일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통일의 지름길이며 그 과정이기도 한 이러한 긍정적인 남, 북의 노력에 협력하거나 적어도 반대나 방해는 안해야 됨을 우리의 외교역량을 동원해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족내부거래가 국제법상 민족자결권과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5조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기본합의서의 관련규정이 갖는 의미는 남북교역이 민족내부교류, 즉 기본적으로 국내거래임을 명시한 것으로서 남북기본합의서의 관련규정은 남북교역에 관한 민족자결권 행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

22) 제성호, “남북교역의 민족내부교류성 인정문제 : 「자결권」을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3권, 1호, 1994, 197-198면., 197-198면.

있다.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로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과정으로서의 남북교역을 민족내부교류로 규정하는것은 당연히 민족자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더욱이 남북한의 정부대표가 민족의 이름으로 만나 통일과정을 논의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서 남북교역을 민족내부교류로써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그러한 합의가 남북한내에서 각기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남북교역 관련규정이 민족자결권의 행사라는데 아무런 이의도 있을 수 없다.

새롭게 출범한 WTO회원국은 물론 전 국제사회가 이러한 합의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되며 민족자결권의 존중은 지금까지 GATT가 분단국 내부교역에 대해 보여준 관행과 일치하는 것²³⁾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제3국은 물론 WTO도 남북교역의 민족내부 교류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다.

그렇게 할 경우 이는 종전의 GATT의 관행에도 부합되지 않을뿐 아니라 한민족의 자결권행사를 존중할 의무에도 반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대해 이러한 사실을 의연하게 강조하는 한편 남북교역의 민족내부교역성을 기정 사실화함으로써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서 국제사회의 부당한 요구를 지지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남북한간의 직교역을 활성화, 제도화시켜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민족경제의 발전을 모색하고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형성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인 통일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의 매진은 환태평양권을 중심으로한 블록경제의 결성시에도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중국, 동남아시아국가들에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다른 블록경제권과의 갈등시에도 안정된 국내시장을 확보할 수 있고 환태평양권의 핵심적 국가로써의 잇점을 백분 활용하여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명분과 상응된 실리외교를 구사하는 전술적 방안도 고려 해 분석하다. 즉 북한경수로 부대시설 건설추가지원 전액부담에 따른 협상건을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미국에게 남북의 민족내부거래를 인정받는 대신 경수로 부대시설 추가지원액 전부를 부담하겠다는 협상안이다. 이것의 성사여부는 이미 지적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교적 역량 즉 협상력에 달려 있을 것이다. 물론 미국 이외에 일본, 유럽국가들에게도 이러한 조건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독일의 선행사례가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건이나 제한없이 민간기업의 대북접촉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 사항을 보완, 수정 또는 개정해 나가는 것도 무차별적인 경제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이와 관련된 법적 사항을 수정 또는 개정하여 규제위주에서 탈피한 전향적인 정책, 예를 들면 안보상황과 무관한 품목에 대해서는 승인에서 신고제로 변경하거나 승인자체를 폐지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치는 북한과의 직교역을 증대시키는 유인동기를 우리기업들에게 줄뿐 아니라 북한의 개방도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²⁴⁾

23) 동서독간의 교역과 관련하여 1951년 구서독은 GATT가입을 위한 가입의정서체결시 동 의정서내에서 GATT협정상의 최혜국대우의무면제의 유보를 받은바 있다. 즉 GATT체약국단은 "서독의 GATT가입으로 독일산물품의 내독간 교역에 관하여 현재 존재하는 규정이나 현재의 교역상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함으로써 내국간 거래성을 승인 하였던 것이다. 그 때문에 동서독의 경우 내독간거래의 국제적 공인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더이상 복잡한 문제로 제기되지 않았다. 내독간 거래에 관한 이와 같은 GATT의 선례는 분단국인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많다. 제성호, "앞의 논문", 194면.

셋째, 북한의 내부사정이 유동적이고 김정일체제의 안정된 구축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구태여 정부간 경험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으며 경험에 있어 보다 단력적이고 신축적인 유연전략을 구상해 나가야 한다.²⁵⁾ 아직도 남, 북정부간의 불신이 내재하고 있으므로 거부감이 덜하고 북한으로도 부담스럽지 않은 민간기업을 교류의 첨병으로 활용하여 남북경협을 교두보를 쌓게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란 생각이 든다. 이 과정에서 이북출신 기업인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다.²⁶⁾

사실상 남북경협이 부진한 이유는 북한탓도 크지만 한국정부탓도 없지 않다. 한국정부는 남북경협을 선결과제로 당국자협의 우선원칙을 내세웠을뿐 아니라 이를 통해 통일을 이루겠다는 공세적 통일전략을 공공연히 내비추었다. 그뿐 아니라 북핵위기 시기에 적실성과 시의성을 지닌 확고한 통일정책을 구상하여 실행치 못하고 그로인해 남북경협에 관한 정책적 일관성과 연속성을 결여하면서 우왕 좌왕하는 정책적 우(愚)를 범하였다.²⁷⁾

최근에도 한국기업인 60명의 나진, 선봉지구시찰을 허용하겠다는 결정이 언론에 발표²⁸⁾된지 하루만에 방북불허라는 결정으로 180도 선회한 것 등은 이러한 대북정책의 일관성결여를 대변하는 사례라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 공식적인 접촉은 거부하고 비공식적이고 사(私)적인 접근만을 수용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초기적 접근방법으로 당국자접촉은 지양하고 민간기업의 진출과 투자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을 취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즉 남북경협을 전략적 차원에서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풀어 나가자는 것이다.²⁹⁾

이렇게 하면 일단 남북경협을 물꼬는 트일 것이며 일단 물꼬가 트이면 다음의 접근수순으로 남북경협을 활성화단계로 들어 가는데 이를 위해서 투자보장협정이나 이중과세협정 그리고 청산계정 및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협정 등 제도적 경험보장장치가 체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투자보장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가 아무리 기업으로 하여금 북한에 들어가 투자를 하라고 하여도 기업은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도 정치적 불안정, 통신, 항만, 전력 등 기간 사회간접자본의 미흡, 법, 제도적 장치의 미비, 협소한 북한의 내수시장, 대외채무지불지연문제 등으로 외자유치가 저조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부분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특히 투자환경을 개선기 위해 투자유치법령의 제정과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북한은 경제특구지정 이후 1992년 10월 외국인투자법, 외국인 기업법 및 합작법을 제정하고 합영법 시행세칙을 개정한데 이어 1994년 4월 자유경제무역항규정까지 총 16개의 투자유치관련법령들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다.³⁰⁾ 그리고 최근에 제정 또는 개정된 북한의 외자유치관련법은 적용대상의 범위에 외국의 법인 및 개인과 함께 “공화국(북한) 영역밖에 거주하는 조

24) 김규륜, 「미국의 대북한관계 개선전망」, 「남북한관계현황 및 95년 정세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4, 21면.

25) 안석교, 「남북한 경제교류의 당위성과 접근방식」, 「북한연구」, 8권, 여름호, 1994, 8면.
송태수, 「북한경제의 실태와 대외개방에 대한 전망」, 「김일성사후 북한의 정책변화전망」, 제7회 통일문제학술세미나, 43, 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1994, 42면.

26) 「조선일보」, 94. 9. 5, 11면.

27) 박영호, 「북·미합의이후의 남북한관계」, 「남북한관계 현황 및 95년 정세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4, 13면.

28) 「조선일보」, 1995. 9. 21., 1면.

29)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의 대외개방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럴 경우 북한의 대미, 대일, 대중, 대러시아 경제협력관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결과 북한에 대한 한국의 경제파트너로서의 의미와 중요성이 감소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제협력을 내세워 경제외적인 문제, 다른말로하자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의 정책적 운신의 폭은 그에 상응하여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송태수, 「앞의 논문」, 1994, 43면.

30) 남궁영, 「북한의 외자유치정책운용실태와 성과분석」, 「통일연구논총」, 제3권 1호, 1994, 54-55면.

선동포들”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어도 경제교류나 협력에 있어서 합영법 제정당시와는 변화된 북한의 대남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³¹⁾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사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따른 시의성을 활용해 북한과의 투자보장협정 등을 체결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와 김일성사후 조문사절문제 등으로 정부간 접촉의 어려움은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남북의 정부간접촉을 통한 이런 방향으로의 문제해결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에 일조를 하고 한국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득을 얻어 내기위해선 북한주민의 정서를 해치는 기업활동은 자제되어야 하며 정치적 공세로 비쳐질 수 있는 정부당국의 실이은 통일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들도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해도 경제교류가 본격화하기까진 투자보장협정 체결 등 제도적 경험보장 장치마련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으므로 사업추진은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추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기업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국익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조직적이며 일관성있게 일을 추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 미국과 일본에 의한 북한시장 진입을 우려만 할 것이 아니라 미, 북관계개선과는 별도로 미국과 일본과의 기존 결속관계를 더욱 다지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북한에 대해서는 주변4강의 외교채널을 통해 남, 북한간의 대화창구확보 및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시켜 나가야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 일본기업과 공동으로 북한시장에 진출하는 적극적 대응방안도 신중하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과 컨소시엄이나 합작방식으로 북한의 취약한 사회간접자본건설에 대한 공동참여방식을 통해 북한에 진출하는 것으로 북한의 경험거부를 회색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그리고 북한이 문호개방의 제1차 협력파트너로 중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중국³²⁾과 공동진출을 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러시아와도 협력을 하여 특히 경수로건설이나 러시아와 인접한 나진, 선봉지구의 개발에 공동참여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추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노력은 변모되고 있는 세계경제환경의 일반적 정서와도 부합되는 것으로 한국의 남북경협을 위한 잇점을 배가시켜 줄 것이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 등의 주변 4강보다 한국을 더 선호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실리(實利)를 북한에게 내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을 위시한 동남아 개도국들의 경우에서 보여주었던 경험적으로 성공적인 사례들을 북한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의 경제발전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후발 개도국들의 본보기 모델로 활용되고 있고 또한 북한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있어 가장 유용한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남, 북의 내부거래로 인한 잇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이외에 경험을 통한 남, 북간장안화로 군사비 등의 체제유지비용을 절감시켜 이를 경제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잇점도 북한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북한경제를 회생시킴으로써 북한의 체제유지와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고 상호 신뢰회복 과정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여건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또한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과 서로 결합되므로써 상호보완을 통한 승수효과로 단시간내 민족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고 남, 북의 상호신뢰회복은 주변 4강의 영향력을 중립화시켜 남, 북의 민족자결에 따른 통일로 나아

31) 최수영,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 활성화방안”, 『통일연구논총』, 제3권 1호, 1994, 83면.

32) 대북한 상품교역의 중개지로는 홍콩,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지역의 중개에 의한 교역은 남북교역총량의 90%를 상회하며 홍콩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1991년 이후 남북간 교역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현저히 증가했으며 1992년 8월 한중수교로 중국의 비중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오승렬, “앞의 논문”, 1993, 173면.

갈 수 있게 한다는 점도 북한에게 부각시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방만하게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남북경협관련 정부조직을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정비할 필요가 있다.³³⁾

통일원, 외무부, 안기부, 상공부, 재정경제원, 국방부 등 여러유관기관들의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경험의 초기에는 통일원으로 단일창구화하고 여기에 『남북경협추진위원회(가칭)』를 설치하며 각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전문관료들이 이 위원회를 통해 남북경협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관장하고 필요하다면 그 하부구조에 실무전담반을 구성하여 세부지침이나 기술들을 개발, 평가하는 일을 전담토록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실제적인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고 활성화단계가 되면 그때가서 남북경협의 주도권을 재정경제원에 이관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초기단계에서는 남북경협이 단지 남과 북의 경제행위만은 아니며 통일정책과 결보 유리될 수 없기 때문이며 활성화단계가 되면 교역규모나 내용, 그리고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논리에 따른 해법이 보다 필요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IV. 글을 마무리하며

남북공존과 교류는 급격히 소용돌이 치고 있는 세계환경에서 남북이 생존하려면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 대안이다. 신국체질서에 따라 변모하는 세계환경은 더 이상 소모적인 남북한의 갈등을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 한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세계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한편으로는 남북경제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키 위해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노력이 절실하고 또한 환태평양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블록 결성과 이의 참여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과 일본과의 남북교류에 관한 제반문제에 있어 선의의 경쟁과 주권국가로서의 의연한 대응을 모색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서 앞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면도 없지 않으나 이에 초조해하거나 좌절을 하여서는 안된다.

남북경협에 임하면서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적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세계경제환경의 흐름을 시의적절하게 판단하여 이에 부응하는 정책방향과 대안을 강구해 나간다면 미국과 일본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연관하여 남북경협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관련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의 효율적인 결정과 집행을 위해 남북경협창구의 일원화가 요구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관련부처간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북경제교류를 국가간 교역으로 인정하려는 WTO와 국제사회의 정서를 강하고 자주적인 외교적 협상력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도 주권외교의 역할이라 말할 수 있으며 급변하고 있고 살얼음판과 같은 오늘의 세계경제환경을 헤쳐나가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다.

33) 「중앙일보」, 1994. 11. 3., 6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상호교류와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 스스로 개방화의 길을 자연스럽게 걷고 더 나아가선 자생력을 갖도록 하여 향후 다가올 경제적 통합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적 의미를 떠나서라도 이러한 경제적 통합의 의의는 현재와 같은 국제환경에서는 남북한 모두 필요로 되는 접근이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기존의 폐쇄적인 경제체제로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체제유지에도 한계를 갖을 수 밖에 없으므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여러가지 측면에서 잇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한국과의 교류와 경제협력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남북이 경제적으로 통합되고 이를 통해 남북의 경제력이 증대될 때 세계 경제에서의 남북의 경제위상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민족이익이나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하여 새롭게 짜이지는 블록경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며 장차 다가올 정치통합에서도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남북경협을 기부하고 있다고 해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³⁴⁾ 북한경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관한 여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정부가 진정 북한경제를 지원한다는 인식을 북한지도부에 심어주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대북한 경제협력을 ‘주는자와 받는자’의 관계 또는 ‘시혜자와 수혜자’의 구도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여야 하며 남북경협을 경제외적인 문제해결의 지렛대로 환용하려는 의도를 한국측이 갖고있지 않음을 분명히 북한측에 인식시켜야 한다.³⁵⁾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보다 획기적인 전향적 조치를 한국정부에서 취해 신뢰감을 유도해내고 이를 통해 북한이 한국과의 경험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교류협력법과 같은 관련법들에 대한 전향적 개정, 보완, 수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전향적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남북경협이 남북문제해결의 반능약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한국의 배려와 북한의 호응간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구절을 통한 남북경협은 본질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한에 대한 쌀지원에서도 정부가 국민적 합의의 도출해내지도 않고 지나치게 시두르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에 일말의 도움도 주지 못했고 오히려 한국민의 자존심에 명만들게 하는 정책적 우(愚)를 범하였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경험에 조금하게 연연한 나머지 북한의 인권 등을 묵인하고 할말을 하지 못하는 처사 등은 과감히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아직 북한의 정치체제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점을 감안하여 시간을 두고 장고하면서 모든 사태와 상황에 대비하는 소신있고 장기적인 대북경협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지도부의 변화와 주변4강의 남북경협을 둘러싼 역학관계, 그리고 세계경제환경의 구도가 항상 변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나친 낙관이나 비관은 피하고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남북경협 더나아가서는 남북통일의 대업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정치, 외교, 경제, 사회적인 역량을 키우는데 국민적 힘을 건집시켜 나가야 될 것이다.

34) 안석교는* 남북한간의 경제교류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송태수도** 우리정부의 대북한 경제정책은 강경보다는 보다 유화적이고 신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 안석교, “앞의 논문”, 8면. ; ** 송태수, “앞의 논문”, 42면

35) 동용승, “통일과정과 남북경협”, 『삼성세계경제』, 제9권 24호, 1994, 24면.

참 고 문 헌

- 김규륜, “미국의 대북한관계 개선전망”, 『남북한관계현황 및 95년 정세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4, 21면.
- 김철수, “WTO체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미래의 세계』, 제33호 (1994), 4면.
- 남궁영, “북한의 외자유치정책운용실태와 성과분석”, 『통일연구논총』, 제3권 1호, 1994, 54-55면.
- 동용승, “통일과정과 남북경협”, 『삼성세계경제』, 제9권 24호, 1994, 24면.
- 박영호, “북·미합의이후의 남북한관계”, 『남북한관계 현황 및 95년 정세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4, 13면.
- 송태수, “북한경제의 실태와 대외개방에 대한 전망”, 『김일성사후 북한의 정책변화전망』, 제7회 통일문제학술세미나, 43, 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1994, 42면.
- 안석교, “남북한 경제교류의 당위성과 접근방식”, 『북한연구』, 8권, 여름호, 1994, 8면.
- 오승렬, “남북경협추진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 『통일연구논총』, 2권, 2호, 1993, 175면.
- 제성호, “남북교역의 민족내부교류성 인정문제 : 「자결권」을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3권, 1호, 1994, 197-198면.
- 『조선일보』, 94. 9. 5, 11면.
- 『중앙일보』, 1995. 9. 20., 1면.
- 『중앙일보』, 1994. 11. 17. 2면.
- 『중앙일보』, 1994. 11. 3., 6면
- 최수영,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 활성화방안”, 『통일연구논총』, 제3권 1호, 1994, 83면.
- Drucker, Peter F. (1993). *Post-Capitalist Society*, New York : Harper Business.
- Friedman, George and Meredith Lebard. (1991). *The Coming War With Japan*, New York : St. Martin's Press.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1).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April.
- Krugen, A. O. (1974).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nt-Seeking Socie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69, No.3.
- Margenthau, Hans J. (1973).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 Alfred Knopf.
- Mead, Walter Russell. (1989).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Economy*, Walter Russell Mead, "From Bretton Woods to the Bush Team", *World Policy Journal*, Summer.
- Rosecrance, Richard. (1986). *The Rise of the Trading State*, New York : Basic Books, Inc.
- Rosecrance, Richard , and Arthur Stein. (1973). Interdependence : Myth or Reality, in *World Politics* (July)
- Simon, Beavis and Jule Wolf. (1990). "Europe Sets Its Sights on Lead in New TV Market", *Europe*, June 26.
- Stewart, Michael. (1984). *The Age of Interdependence*, Cambridge, Mass.: MIT Press.
- Thurow, Lester. (1992). *Head to Head : The Coming Economic Battle Among Japan, Europe, and America*, New York : William Morrow and Company, Inc.
- Waltz, Kenneth. (1970). The Myth of National Interdependence, in Charles Kindleberger, ed.,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Cambridge, Mass.: MIT Press.